

‘국문금순’ 압록강당건설련맹 설립



3월 20일, 전국 광회 및 '3급' 작업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고 지역간·부문간 당건설 공동건설의 질적 효과를 전면적으로 심화하기 위해 장백출입경변방검사소 근무 1 대대당지부와 집안출입경변방검찰소 근무 2 대대당지부, 릉강출입경변방검찰소 근무 2 대대당지부, 백산세관 릉강통상구 감독관리과당지부, 통화세관 집안 주재 판사처 로호초통상구 감독관리과당지부, 장백세관통상구 감독관리과당지부, 통화세관 밀수단속분국당지부, 장백세관 밀수단속분국당지부 등 8개 단위는 '국문금순'(国门金盾) 압록강당건설련맹 2026년도 제1회 회상 련석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련맹단위 주요 책임자 및 공동건설 당지부 당원 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국문금순' 압록강당건설련맹 2026년도 사업 시행 방안)을 선포하고 공동건설 당지부들이 차례로 당지부 당건설 사업 성과를 보고함과 아울러 경험과 방법을 깊이있게 교류했으며 2026년도 당건설련맹 사업목표, 중점업무, 추진방안을

함께 연구했는바 사상 통일, 공감대 형성, 발전 도모의 사업목표를 달성했다.

이번 련석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압록강류역 '1강·3지·8개 공동건설단위'(一江三地八家共建单位)가 함께 구축한 '1+3+8' 당건설 사업의 새 구도가 정식으로 형성되었음을 표시한다.

'국문금순' 압록강당건설련맹은 향후 당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전면적으로 학습 관철하고 '당건설+'를 견인으로 '자원 공유, 우세 상호 보완, 협동발전, 협력 강화' 사업 원칙을 고수하며 당건설, 통상구 통제, 범죄 단속, 서비스 발전 등 면에서 실질적이고 혁신적이며 효과적인 성과를 추구하고 압록강류역 특색을 갖춘 당건설련맹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힘써 고품질 당건설을 통해 이민관리 사업과 주둔지 경제의 고품질 발전 추진에 힘을 모으고 경쟁력 있는 책임을 보여 줄 것이라고 전했다.

/ 글 김명준기자 / 사진 장백출입경변방검사소

가정폭력 피해자 리혼 청구 등 민사지지도소송 신청 가능

최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민사지지도소송(民事支持起诉)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하고 당사자가 평등하게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공동으로 <민사지지도소송사건 처리 약관의 문제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지도의견>은 민사상 권익이 침해 받은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권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거나 소송 능력이 부족하거나 감히 또는 스스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민사소송법 제 15조 등 규정에 따라 해당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의 지지소송 직능수행을 지지하고 공동으로 소송 활동의 순조로운 진행과 당사자의 평등한 소송 권리 행사를 보장한다.

<지도의견>은 농민공 임금 청구,

로령화·질병·로동능력 상실 등으로 독자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한 경우의 부양비, 양육비 청구, 가정폭력 피해자의 리혼 청구, 손해배상 청구 또는 인신보호명령 신청, 장애인 인신권리·재산권리 또는 기타 합법적 권익 침해, 미성년자의 인신권리·재산권리 또는 기타 합법적 권익 침해, 군인·군인가족 및 열사·공무중 사망한 군인·병으로 사망한 군인 유가족의 인신권리·재산권리 또는 기타 합법적 권익 침해 등 당사자가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인민검찰원에 민사지지도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당사자가 인민검찰원에 민사지지도소송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 신분증명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당사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은 이를 기록에 남긴다.

/ 법치일보

최고인민법원 <지침> 발표, 미성년자 온라인 후원 환불 상황 규정

3월 18일,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미성년자 관련 민사사건 심리 업무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최고인민법원이 미성년자 관련 민사재판 업무를 위해 마련한 최초의 사법 문서로 미성년자 범죄 예방 및 관리 강화에 중요한 지도적 의미를 갖는다. 사법 실무에서의 논란이 크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문제들에 대해 <지침>은 실무에 적용 가능한 규칙으로 하나하나 정리했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의 온라인 충전(网络充值) 및 라이브 방송 후원(直播打赏)의 효력 판단 방법과 무효 판정 시 처리 방안을 확립하여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했다.

아이가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고액을 충전하거나 후원하는 것은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 성실과 정의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우리 나라 법률 체계는 시중 '미성년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민법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해 보호적 제한을 두어 미성년자가 자신의 인지능력에 부합되는 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실무를 살펴보면 많

은 주요 플랫폼에서도 비교적 완비된 미성년자 보호 기제를 구축해놓고 있다. 예를 들면 틱톡은 확인된 미성년자 후원 소비에 대해 평균 24시간 내에 환불을 완료하고 플랫폼이 우선 전액을 선지급하는 등 환불 효율성 측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2025년 한해 동안 9만가구의 환불을 지원했고 9만 2,000개 계정·미성년자 후원 관련 문제로 충전·소비 기능이 정지되는 등 플랫폼이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리행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는바 이는 업계의 모범사례로 자리잡았다.

선의는 오히려 리해되어야 하고 규정은 선의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미성년자 라이브 방송 후원 환불 제도는 심각한 신뢰 위기에 직면, 두가지 경계해야 할 이질적 현상을 보였다. 첫째, 일부 성인이 '차용'(借壳) 환불, 즉 라이브 방송 후원을 한 후 미성년 자녀가 한 행동이라며 거짓말을 하여 소송이나 비소송 방식으로 환불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법 자원을 낭비하고 성실신용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둘째, 불법 산업 체인이 생겨나 조직화된 사기산

업을 형성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대리 환불'을 내세우는 업체가 다수 등장하여 사용자에 미성년자 신원 정보를 위조하고 허위 후원 상황을 조작하며 심지어 거짓말이나 위조한 증거를 통해 환불을 받는 방법을 교사하고 있다. 더 깊이 생각해보면 점은 일부 사건의 경우 보호자가 실직(失职)하거나 오히려 플랫폼 규정을 위회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한 10세 소년이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여러번 사용하여 방송 진행자에게 후원한 후 어머니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전액 환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우리는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보호자가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심지어 아이의 위법행위를 방조하는 상황에서 플랫폼에 단순히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일까? 이러한 배경하에 최고인민법원이 <지침>을 발표하여 법의 본래 취지로 돌아가 아이의 기부는 무효로 모두 전액 환불되어야 한다는 법적 오해를 바로잡은 것은 불성실한 행위자를 폭로하고 여러 주체가 각자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지침>은 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허위 소송의 위법 원인을 높임으로써 미성년자 보호 기제를 약화하여 부당 리익을 취하려는 불성실 행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지침>은 계약 체결 행위가 미성년자의 연령, 지역에 부합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약 효력을 정확히 확정해야 하며 설령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연령, 지력, 계약 체결 과정, 보호자의 보호 책임 리행 상황 등의 요소에 따라 여러 당사자의 과실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보호자가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예를 들면 자녀가 결제 비밀번호를 알게 내버려두거나 류사한 상황이 여러번 발생한 경우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호자도 과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지침>은 여러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는 사회, 감독관리부문, 플랫폼, 보호자 각자가 책임을 다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시스템적인 과제이다.

/ 법치일보

중국소비자협회, 전국 소비자 권익 보호 10대 전형사례 발표

최근, 중국소비자협회와 중국응용법학연구소는 사법사례가 소비자 권익 보호 사업에서 발휘하는 사법적, 선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업계의 규범화를 촉진하며 권익 보호 지침을 강화하고 사회 공동 관리를 추동하기 위해 2025년도 전국 소비자 권익 보호 전형 사법사례 선정 사업을 진행, 북경시제 3 중급인민법원, 료녕성 대런시 중급인민법원, 중경시제 5 중급인민법원 등에서 추천한 10개 사례가 입선되었다.

10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손모모가 북경 대방로 중서의결합병원유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서비스계

약분쟁사건, 왕모모가 흥업은행주식유한회사 북경동외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금융위탁재테크계약분쟁사건, 리모모가 북경경동세기정보기술유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네트워크 매대계약분쟁사건, 궁모모가 대런시 서강구 패사특기(贝斯特琪)건강관리서비스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씨비스계약분쟁사건, 진모모와 방모모가 상해경업러행사유한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생명권분쟁사건, 손모모가 성도근초상무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네트워크매대계약분쟁사건, 류모모가 낭파에합중고차중개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매대계약분쟁사건, 주

모모가 상해심몽정보기술유한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네트워크매대 계약분쟁사건, 왕모모 등의 '주문조작, 신용 부풀리기' 사건, 정모모가 중경호준석유화학유한회사 영창구 영으로 허계로구주유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제품판매자책임분쟁사건 등이다.

중국소비자협회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이번에 발표된 전형 사법사례는 여러 소비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바 의료분쟁, 금융소비, 선불식(预付式) 소비, '큰 글자로 눈길을 끌고 작은 글자로 책임 면제 조항 써넣기'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주유소 계량 부정행위에 대하여 소비자는 어떻게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가' 등 문제에 답을 제시함으로써 소비 분쟁에 대한 사법 실천의 적극적 응답을 구현하고 공평정의의 가치 지향을 천명했다.

관할권, '주문조작, 신용 부풀리기', 주유소 계량 부정행위 등 소비자 권익 보호의 열점, 난점과 애로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례로 법을 해석하는 방식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갖는 '의료분쟁에서의 소비자권익 보호법 적용 여부', '큰 글자로 눈길을 끌고 작은 글자로 책임 면제 조항 써넣기'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주유소 계량 부정행위에 대하여 소비자는 어떻게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가' 등 문제에 답을 제시함으로써 소비 분쟁에 대한 사법 실천의 적극적 응답을 구현하고 공평정의의 가치 지향을 천명했다.

/ 인민넷-조문판

푸른신호등 2 초 남겨두고 무리하게 건너다가 사고... 보행자도 책임져야

푸른신호등을 무시한 채 무단 횡단하는 것은 천만 위험함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보행자가 푸른신호등일 때 횡단보도를 급히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할까?

백모모는 이륜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왕모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왕모모는 발목뼈가 골절되어 10급 장애를 입었다. 교통경찰은 사고조사서에 기본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사고 원인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상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자 왕모모는 백모모와 그의 이륜오토바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의료비, 장애 배상금 등 총 25만여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의 심리 결과 백모모가 빠스 전용 차길에서 운전하고 우측통행을 하지 않았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일시 정지하지 않은 점 등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니터링 영상을 보면 왕모모가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보행자 신호등이 붉은신호등으로 바뀌기까지 2초 밖에 남지 않았고 2초의 시간은 안전하게 횡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무리하게 건너려 했는데 이것도 사고 원인중 하나로 나타났다. 법원은 쌍방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왕모의 책임을 20%로, 백모모의 책임을 80%로 인정했다. 휴업 손해에 대해 왕모모는 월 1만 2,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유효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법원은 해당 지역 관련 업종의 평균 임금 기준으로 계산했다. 최종 보험회사는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왕모모의 합리적 손해에 대해 80%를 배상하고 부족한 부분을 백모모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운전을 하든 보행을 하든 교통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차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하며 보행자가 건널 때에는 양보해야 한다. 보행자도 교차로를 통과할 때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바 몇초를 두고 서둘러 길을 건너는 무모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교통안전에는 사소한 일이 없다. "잠시 멈추는 것이 몇초를 다루는 것보다 낫다."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생명안전을 위한 확실한 보장이다. 모든 교통 참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 길림성사법청

图说 我们的价值观

友诚教爱法公平自和文民富
善信业国治正等由谐明主强

诚信是福

山西运城 李惠芳作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